

도의회 교육위, 내년 예산안 심사 돌입

9일~16일 행정사무감사
24일~30일 예산 심사
7건의 안건 의결도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장명식)가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들어갔다. 9일 회의에 따르면 교육위는 제338회 제1차 정례회를 시작으로 오는 12월14일까지 도교육청을 비롯한 직속기관, 시군교육지원청 등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며 각 기관들의 내년도 세입·세출 예산안도 의결한다. 또한, 조례안 3건과 동인안 4건을 포함해 총 7건의 안건도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교육위는 이번 정례회를 통해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와 꼼꼼한 2017년도 예산안 심사로 최적의 정책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번 제1차 본회의에서는 장명식(고창2) 위원장과 최인정(군산3) 부위원장이 각각 대표발의한 '교육부 누리과정 및 교부금 삭감 규탄 결의안'과 '교육부의 퇴행적인 학교시설 행정 규탄 결의안' 등이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9일부터 16일까지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교육행정의 현안사항과 추진사업들에 대해 세밀히 짚을 계획이다. 특히, 누리과정 예산과 함께 학교석면 해체·제거 등 교육시설 등에 집중적으로 짚어나간다. 9~10일은 교육위 회의실에서 전라북도 교육청을 상대로 행감을 시작한다. 또한, 11일 전주교육청으로 자리를 이동해 전북

교육문화회관을 비롯해 전주, 정읍, 김제, 완주교육청 등을 상대로 꼼꼼히 행감을 진행한다. 14일은 전북교육연수원에서 전북교육연수원과 과학교육원 등 직속기관, 15일 일실교육지원청에서 동부산악권 6개 시군교육청 등을 상대로 행감을 진행한다. 교육위는 갈수록 심각해져가는 지역간 교육격차를 줄일 수 있도록 자유학기제의 합리적 운영을 통한 해소방안 마련과 교육공무직원들의 처우개선책 마련을 당부한다. 또한, 교육시설에 대한 내진보강 및 각급 학교의 실질적인 대피훈련과 비상대비 물품 확보를 통한 지진대비책 마련을 촉구한다. 21일 최종적으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22일과 23일 1박2일동안 교육위원회 연합회가 열린다. 이어 24일부터 30일까지 전라북도교육청과 직속기관, 14개 시군교육지원청 예산을 심사한다. 30일에는 계수 조정에 들어간다. 또한, 누리과정 예산 등 도교육청 예산의 합리적인 운영과 실효성, 재원확보 대책 등으로 예산 운영 방안 등에 대해 질의하고, 교육공무직원들의 처우개선책 마련 등을 촉구할 예정이다. 장명식 위원장은 "올해 교육청에서 추진해 온 각종 교육행정에 대해 그동안의 성과와 추진상 미비점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할 예정"이라며 "내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심사를 통해 한정된 교육예산이 도내 학생들에게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고민형 기자

광화문 촛불집회 날에 골프모임 "친박, 역시 박 대통령 지지 충실"

국민의당은 9일 새누리당 친박계 일부 의원들이 광화문 촛불집회가 열렸던 29일 골프모임을 가졌던 사실이 논란이 되고 있는 데 대해 "역시 친박 의원들께 대통령의 지시를 충실히 이행하는 모양"이라고 비교했다. 김경록 국민의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은 올해 9월 내수를 살리기 위해 골프를 치라고 지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인해 국민들의 분노가 차오르다 못해 폭발하는 지금 국회의원이라는 분들에게서 골프 모임을 가졌다는 것이 말이나 되느냐"고 질타했다. 그는 이어 "박근혜는 하야하라"는 국민들의 외침이 유독 친박 의원들에게는 들리지 않는 것 같다"며 "친박 의원들이야말로 박 대통령 격정에 발잡을 설쳐도 모자란 때가 아니냐"고 꼬집었다. 그는 "새누리당 친박 의원들께서는 골프제 휘두름을 국가를 위해, 그리고 국민을 위해 써주시길 당부한다"고 일갈했다. 앞서 새누리당 재선 이현승 의원과 초선 권석창, 문진국, 김순례 의원은 지난달 29일 충북 단양 한 골프장에서 골프 모임을 가졌다. 당일은 박 대통령이 '비선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일부를 인정했던 1차 대국민담화 후 맞은 첫 주말로, 서울 광화문에서 박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대규모 촛불집회가 열렸던 날인데다 당시 박 대통령 지지율이 한 자릿수까지 추락하는 상황이었다는 점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뉴스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 공화당 '상·하원 트리플 승리'

미국의 45대 대통령에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됐다. 미 역사상 처음으로 부동산 역만장자이자 정치 '아웃사이드' 출신 대통령이 탄생했다. 공화당은 대선 외에도 상원과 하원에서도 승리를 예상해 올랐던 '트리플 승리'를 일궈냈다. 9일(현지시간) 막바지 대선 개표가 진행 중인 가운데 트럼프가 선거인단 276명을 확보해 당선을 확정지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보도했다.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은 선거인단 218명을 따냈다. 미국 대선에서는 득표율과 관계 없이 선거인단 270명(총 538명의 과반)을 달성하는 후보가 최종 승자가 된다. AP통신 역시 트럼프가 위스콘신 승리를 기점으로 선거인단 270명을 확보하면서 대통령에 당선됐다고 급전했다. 뉴욕타임스(NYT) 역시 276명 대 218명으로 트럼프의 승리를 알렸다. 클린턴은 트럼프에게 전화를 걸어 승패를 인정했다고 CNN방송이 보도했다. 클린턴 측은 이날 중 후보의 연설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트럼프는 플로리다, 펜실베이니아, 오하이오, 노스캐롤라이나 등 핵심 경합주에서 줄줄이 승리했다. 클린턴은 전통적인 민주당 텃밭 지역들만 겨우 지켰다. 현지 언론들은 대선 전날까지만 해도 클린턴의 승리를 일제히 예상했지만 투표함 뚜껑을 열어보니 결과는 정 반대였다. 트럼프가 클린턴을 압도적 표차로 이겼다. /뉴스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의 제45대 대통령에 당선됐다. 사진은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당시 대선후보였던 8일(현지시간) 미시간주 그랜드 래피즈에서 열연을 하고 있는 모습.

민주당 도당, 위원장 7명 임명 최은희·오경남·강용구 한송진·김형곤·두형진·전창재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이 신임 대변인단을 임명한 데 이어 각급 위원장도 선정·발표했다. 9일 더민주당 전북도당에 따르면 도당 발전을 이끌어갈 7명의 위원장을 임명했다. 임명된 위원장은 ▲여성위원장 최은희 도의원, ▲노인위원장 오경남 대한노인회

전주시지회장, ▲청년위원장 강용구 도의원, ▲대학생위원장은 한송진 전 전북총학생협의회회장, ▲장애인위원장 김형곤 전북지체장애인협회장, ▲노동위원장 두형진 한국노총전북본부 의장, ▲농어민위원장은 전창재 전 한국농업경영인 전북도회장이

임명에 대한 도당 발전의 기대감이 크다"라며 "특히 내년 대선 승리를 위해서라도 각급 위원들의 역할이 막중하며, 도민들이 바라는 변화와 욕구에 부응하는 위원장들이 돼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지난 8일 신임 대변인단과 '을 지키는 민생실천위원장'을 임명한 바 있다. /고민형 기자

야3당 "박 대통령 제안, 일고의 가치 없다... 12일 민중총궐기 참여"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은 9일 박 대통령에게 국가가 추천한 신임 국무총리에게 내각 통할권을 주겠다고 밝힌 데 대해 공식 거부 입장을 밝히며 12일 민중총궐기 대회에 당 차원에서 참가해 박 대통령 규탄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추미애 민주당, 박지연 국민의당,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사랑장에서 회동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야3당은 박 대통령의 전날 내각 통할권 부여 제안에 "일고의 가치 없다"는 평을 내놓으며 거부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혔다. 박 대통령이 신임 총리에게 부여할 세부적인 권한을 설명하지 않은 만큼 진정성이 없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이날 회동에

선 총리 후보 추천에 관한 논의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그러면서 야3당은 12일로 예정된 민중총궐기에 당력을 집중해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야3당 지도부와 주요 당직자, 의원 등이 12일 민중총궐기에서 시민들과 함께 촛불을 드는 장면이 연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유관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야3당이 최초로 정의집회에서 결할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이날 박 대통령에게 새누리당 탈당을 함께 요구하기로 뜻을 모았다. 박 대통령 탈당을 요구해온 국민의당에 민주당이 동조를 한

셈이다. 이밖에 야당은 검찰에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관련 수사를 촉구하는 한편 국정조사와 특검 도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다음 야3당 대표 회동은 12일 민중총궐기 이후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반면 야3당은 박 대통령의 거취에 관해선 이견을 보여 한목소리를 내지 못했다. 손금주 국민의당 수석대변인은 "각 당의 입장이 약간 달라서 박 대통령의 거취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인 논의를 못했다"고 밝혔다.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박 대통령 탈당 요구에 합의하는 수준에 그친 반면 정의당은 박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한다는 기존 방침을 유지했다. /뉴스

추미애 "박 대통령, 국정 넘기는 것으로 안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9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가가 추천한 신임 국무총리에게 내각 통할권을 주겠다고 밝힌 데 대해 "대통령은 마치 국정을 탁구공처럼 어디에 넘기면 책임이 면해지고 수습이 되리라고 아직도 그렇게 여기는 것 같다"며 박 대통령을 비난하며 2선 퇴진을 재차 요구했다. 추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한 식당에서 종교인협의회를 열고 "정치권이 미봉책으로 '총리를 누굴까'를 만드느냐 하

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민주주의의 원칙과 기본으로 돌아가서 국민 앞에 대통령이 결자해지하는 마음으로 고해성사를 하시든가 사죄를 하시든가 하는 것이 정국 해법의 첫 순서"라며 "아직 그런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라고 비판했다. 추 대표는 또 "대통령이 경제가 어렵다면서 도와달라고 하시는데 기업의 팔목을 비틀어서 경제를 망치신 분이 대통령이었다"며 "민생이 파멸하고, 양극화가 심해지

"박 대통령 결자해지해야"

고, 청년들도 희망이 아무데도 없는 가운데 이런 일을 겪고 보니까 더욱 분노하는 것"이라고 박 대통령을 비난했다. 앞서 추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야3당 대표 회동에서 "박 대통령은 이제 내치든, 외치는 자리가 없다. 세세한 권한을 따질 때도, 총리 후보를 거론하면서 여권이 갑론을박할 때도 아니다"라며 "대통령은 주권자인 국민에게 무릎을 꿇어야 한다"고 박 대통령에게 대통령으로서의 모든 권한을 내려놓으라고 압박했다. /뉴스

비박계, 13일 비상시국회의... "당 해체 공감대"

새누리당 비박계가 13일 '이정현 지도부' 퇴진과 당의 발전적 해체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비상시국회의를 개최한다. 비박계 중진 의원과 '최순실 사태 진상규명과 국정 정상화를 위한 새누리당 국회의원 모임(진정모)'은 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연석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간사적인 황영철, 오신환 의원이 전했다. 비상시국회의에는 당내 비박계 의원을 비롯해 당 소속 시·도지사, 원외당원위원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황영철 의원은 간담회 직후 브리핑을 통해 "현 지도부가 즉각 사퇴해 새누리당이 건강한 보수와 혁신의 가치를 지켜낼 수 있도록 길을 터줘야 한다는 점에 있어서 다시 한번 사퇴를 강력히 촉구한다"며 "새누리당이 책임지고 반성하기 위해서는 결국 우리가 해체를 포함한 새로운 길을 가야하지 않느냐는 의견들이 상당히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새누리당이 해체 수순을 밟고, 새로운 정당의 모습으로 가려면 결국 현 지도부 사퇴를 통한 새 길을 모색하기 위해 길을 터줘야 하는 것"이라며 "조금 더 모여서 뜻을 공고히 하고 의지를 다지는 차원에서 일요일에 모임을 갖기로 했다"고 밝혔다. 오신환 의원은 당 해체와 관련, "분당은 염두에 두지 않고 있다"며 "당 해체라는 것은 새누리당의 역할이 다 소멸했다고 보는 것이다. 그 이후에 어떻게 재창당 할 것인지, 새로운 방향에 대해 모색할 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논의되지는 않았다"고 전했다. 그는 또 "계파 해체는 당연히 당 해체 부분에 포함될 것"이라며 "새누리당이 갖고 있는 모든 문제, 현재의 역사 이런 것들이 발전적 해체되는게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뉴스

문재인 "박 대통령, 대통령 고유권한 내려놔야"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9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가가 추천한 신임 국무총리에게 내각 통할권을 주겠다고 밝힌 데 대해 "박 대통령은 국정 전반을 거국종립내각에 맡기고 국정에서 손을 떼야 한다"고 재차 주장하며 대통령 고유권한까지 내려놔야 한다고 촉구했다. 문 전 대표는 이날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한 뒤 "그 정도는 가야 하야를 요구하는 국민들의 민심에 그나마 부응하는 길"이라고 밝혔다. 그는 박 대통령의 2선 후퇴 수순에 관해선 "내치와 외치를 구분할 수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박 대통령은) 지금 내각 통할권이 이야기되고 있는데 내각의 권한을 넘어서는 대통령의 고유권한도 많이 있다"고 견해를 밝혔다. 이어 "국정원, 감사원, 그리고 군통수권과 계엄권 또는 사법부의 대법원장과 현재의 헌재소장과 헌법재판관을 비롯한 많은 인사권들이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고 덧붙였다. 문 전 대표는 민중총궐기 참석 여부에 관해선 "개인 문재인은 촛불집회에 함께하고 싶지만 정치인 문재인으로서 현 재는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지금 촛불집회가 아주 큰 감동을 주고 국민들에게 큰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은 시민들의 자발적이고 순수한 집회이기 때문인데 만약 정치권에서 결함하게 되면 혹여 이 순수한 집회가 오염되거나 진영논리에 갇혀서 정쟁처럼 되면서 오히려 집회의 순수성을 훼손하게 되지 않을까 우려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문 전 대표는 이날 미국 대선에 관해선 "내가 미국선거를 전망할 수는 없는데 미국의 어느 분이 대통령이 되더라도 한미동맹관계와 북핵의 완전 폐기를 위한 한미간 공조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뉴스